

전력산업기반기금 7,428억 3,500만원 조성

2001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및 요금교차 보조가 제외되는 등 당초 한전예산 기준 금액인 1조 1,502억2,800만원으로 편성 지원될 전망이다.

이번 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공익기능 수행 회피를 막고자 6월부터 정부가 기금을 관할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5월까지 기금을 맡아 집행하고, 6월부터는 산업자원부 관할 하에 '전력연구원'이 전담 관리한다.

이와 관련 올해 전력기반조성사업은 한전이 추진해 오던 공익사업 범주 내에서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시켜 전력산업구조개편 초기단계에서 파생될 수 있는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관리 및 연구개발사업은 올해 한전예산에 반영된 수준으로 지원하고 한전예산 편성원칙을 최대한 존중해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익사업 및 타에너지지원사업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배정하게 되며, 전기안전관리, 전문인력양성 및 전담기관 운영비 등은 신규사업으로 편성 육성된다. 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국가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사업 및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등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한전, 하반기부터는 정부주도로 이뤄지게 될 2001년도 상반기 공익기능 세부지원현황을 보면 ▲전력효율향상사업과 부하관리요금제지원 등

수요관리사업에 1,067억3,200만원 ▲대체에너지·절약기술개발, 전력기술기초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사업에 374억2,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전기안전관리 등 공익사업에 2,537억7,700만원 ▲대체에너지지원 및 열병합발전지원, LNG 등 타에너지지원사업에 3,451억원 ▲제주지역결손지원과 원가이하요금부담 등 요금교차보조사업에 4,074억5,300만원이 배정돼 총 1조1,502억8,800만원이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요금교차보조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제외돼 실제 액수는 7,428억 3,5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전기공급자 중심의 부하관리사업과 전기소비자 중심의 전력효율향상사업을 병행 추진해 에너지수요절감을 유도하고, 금년도에는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해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민간투자 위축에 대비 기반기금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환경·전기절약·전기품질 등 공익적 전력기술수요 및 전력산업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공통기술수요 확대 등에 대응, 전력선도기술·공공전력기술·공통요소기술·인프라구축사업 등으로 재구성해 지원한다.

농어촌전화사업·도서벽지지원사업 등 보편적 전력공급 지원사업은 법정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요금교차보조가 제외될 경우 839억7,700만원에 배정된다.

타에너지지원사업은 국내석탄산업지원 및 LNG

초과 공급물량 지원을 위해 의무구입물량으로 하고, 로 한다.
대체에너지 발전물량 또한 전량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개정 확정

정부는 앞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연구책임자에 대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과제에 책임을 면제하는 등 연구여건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재정키로 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에서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종전 10개 사업에서 전면 수정, 기초·원천기술부터 응용연구까지 R&D(연구개발) 전 과정을 망라하는 14개 세부사업으로 재편하고 기술의 특성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내용과 개발형태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별화시켜 단기간내에 수익창출이 어려운

기반기술의 경우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개발에는 50~70%, 기업단독 기술개발은 33%~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기술료 제도를 개선해, 종전 대기업 50%, 중소기업 30%이던 징수율을 각각 10%씩 낮춰 기업부담을 덜고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총괄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연구원 성과급 배분권한을 부여하고,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는 책임면제(Free to fail) 원칙을 확립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 미활용기술과 기술료비 징수과제 등에 대해 전산자료를 구축하고 한국기술거래소와 연계해 기술이전·확산과 함께 사업화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유망 부품소재 개발에 767억 지원

산업자원부는 산업용 폴리에스터, 고압연료 분사장치 등 개발이 시급한 204개 핵심 부품소재를 발굴해 공고했다. 이들 품목의 기술개발사업자로 선정되면 총 767억원의 개발자금이 지원된다.

산자부는 이번 선정과 관련 “부품소재의 수출입 실태조사,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개발 잠재력 및

시장창출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조사에는 통합연구단 소속 공공연구기관, 업종단체, 관련 기업체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 선정품목에는 지난해 기술개발대상 중 개발 필요성이 남아있는 품목과 125개 신규품목이 추

가로 지정됐다.

총 204개 품목에는 광통신부품 및 온도조절 모듈 등 전자부품이 49개로 가장 많고 화학소재 38개,

기계류부품 30개, 전기부품 26개, 섬유소재 22개, 금속소재 21개, 자동차부품 18개 등이 있다.

제조물책임제 대책 지원사업 추진

국내 중소기업들의 실익보호 차원에서 제조물책임제(PL) 대책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PL에 대비할 수 있도록 PL대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물책임제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전 준비없이 PL이 시행될 경우 야기될 중소기업의 연쇄도난, 대량 실업 등 사회적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며 “PL지원대책을 추진해 내년 시행예정인 PL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시설 개선,

시험·연구시설도입, 생산·설계기술개발, PL컨설팅 등 PL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PL관련기술 지도를 포함, 과제당 300만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제품의 안정성 시험 및 검사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한편 중기청은 PL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 운영하고 있는 PL공제보험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업종별 PL분쟁기구 설치 방안 및 각종 PL정보제공 시스템 구축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달청, 단체수계 물품 중 반복 구매품 대상 단가계약 추진

조달청은 단체수계의 물품 중 반복구매가 되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단가계약을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관련품목 업체 대표 및 관련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전기조합의 경우 수배전반을 비롯한 변압기, 발전기, UPS(무정전전원장치) 등이 모두 이에 해당돼 품목에 따라 현재 조달청과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거나 협의를 하기 위해 업체 나름대로의 대책을 숙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기 품목은 현재 조달청과 가장 많은 부분이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일단 표준사양에 대해서는 기준이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기의 경우 단가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500kW 이하의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물품은 현재와 같이 총가계약에 의해 계속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발전기조작반 등 옵션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영키로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업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가계약을 실시하더라도 조달청에서는 실례가로 가격을 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원가계산을 별도로 다시 하자는 주장이 맞서 조율을 위한 협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UPS도 현재 조달청과 업체 대표들이 1차협의를 가지고 조만간 표준사양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축전지 등 부속품들에 대한 타입별 사양도 만들어 단가계약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UPS의 경우는 단가계약이 시행될 경우 실가보다 상당 부분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어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전기분야에서 단가계약을 가장 시급히 추진하고자 하는 품목이 배전반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

는 가운데 배전반업계는 조달청과의 협의에 앞서 자체 회의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배전반은 현재 전기조합의 표준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만간 표준규격을 만들어 도면을 조달청에 제출한 후 사양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배전반은 특고압반의 경우 수요처에 따른 사양의 변동이 크게 없어 표준화 작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압반이나 저압반은 수요처에 따라 사양 변동이 많아 표준화하는데 있어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전반도 특수사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총가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압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일정이 잡혀져 있지는 않으나 조달청의 시행계획에 따라 조만간 협의 통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이 이번에 반복구매 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간 거의 비슷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변동이 심했던 것을 지양하고 이를 통해 필요 없는 자제도 대폭적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방침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달청은 배전반을 비롯한 전기조합의 4개 품목을 6월 이내에 단가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의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특허기술 지원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키 위해 특허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특허기술에 필요한 기술 개발비, 창업자금, 시설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377억원 보다 34.2%가 증가한 총 506억원 규모의 '2001년 특허사업화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특허사업 지원계획에 따르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에서 55억원을 출연, 특허기술의 연구개발(R&D)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허기술에 바탕을 둔 창업지원으로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서 50억원을 출연하고, 중소

벤처기업 창업자금에서 50억원을 융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330억원을 산업기반기금 등에서 융자·지원하고 특허기술평가, 외국출원비용 보조, 산업재산권 진단을 위한 보조 지원에도 21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자금지원 이외도 특허기술의 원활한 사업화 촉진에 따른 정보제공, 기술·경영지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관리·지원기관간의 연계체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79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확정

정부는 연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 79개 공공기관이 총 38조8천억원 상당의 중소기업제품(공사·용역포함)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국방부, 조달청 등 79개 공공기관의 '2001년도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을 전년도 구매실적 36조6천억원 보다 2조2천억원이 증가한 38조8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물량의 70.1%(27조2천억원) 상당을 상반기 중에 조기구매토록 하는 '2001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이 최근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물품구매 및 공사발주에 관한 세부정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제공토록 해야하고 단체수계약품목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단체수계약이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분리 구매해야 된다.

이와함께 NT(New Technology), EM(Excellent Machine·Mechanism·Material), KT(Korean Technology) 및 특허제품 등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선 구매해야 하며 입찰시 수급현황, 원·부자재가격, 인건비 등을 감안해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구매실적 점검 등을 통해 구매 독려에 나서는 한편 매월 실적을 파악해 국무회의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구매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구매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무담보·무보증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지원 대출 시행

중소기업청은 담보나 신용보증 없이 1백% 신용 대출만으로 이뤄지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총 5백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올 해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 지원계획'을 확정, 각 지방청에서 신청·접수한다는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발 또는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담보나 신용 보증없이 순수 신용만으로 대출된

다"며 "지원대상은 최근 3년내 중기청에서 시행한 '기술혁신개발 사업' 또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을 완료했거나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98년 이후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제품생산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연리 5.7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기업 소속 계열사나 금융기관에 의해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된 업체,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표준원, 신기술 인증제품 상설전시 계획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전시회가 열린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우수 국산개발자본채 및 신기술 인증제품을 상설 전시해 개발제품 및 업체에 대한 판로지원과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들

제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될 품목은 (주)지에스티이산업의 용접 벨로즈형 진공밸브 등 15품목으로 기술표준원 본관 1층 로비에 전시장이 마련돼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전시된다.

중소기업청, 中企 수출금융 지원확대

수출유망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이

용 폭을 넓히기 위해 수출환어음 매입은행을 현재 외환은행에서 기업은행, 하나은행, 조흥은행을 추가해 총 4개 은행으로 확대했다. 또 지원금리도 중

전 연 6.9%에서 연 6.6%로 0.3% 인하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의 이번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고 수출실적이 없어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올 한해동안 수출실적 7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대출방식으로 순수신용과 보증을 연

계해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수출품 선적후 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함으로써 대출금상환 및 정산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금융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지역본부에 이용신청을 하면 중진공과 수출보험공사가 공동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다.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경우 수출금융지원금리의 추가 인하도 검토중이다.

고효율 절전 제품을 사용합시다.

